

김영록 전남지사 “일본 원전수 방출시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전남 안전 위협 정부에 일본의 모든 수산물 수입 중단 촉구

출을 결정하자 서남해를 끼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즉각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

회견을 갖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그동안 전남도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이 최안전국인 우리나라라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촌 전체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경고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125만t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2051년까지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행하면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 촉구, 일본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도내 해역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남지역 전체의 해양자원 보호와 해양관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광주시구청장협의회 “점심시간 휴무제 시기상조”



지난달 4일 광주 북구청 1층 세무과 민원 창구에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 가운데, 시민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오전 공무

비와 함께 노조와 시기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5개 구청 민원실·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의 점심 식사를 보장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점심 시간 휴무제 시행을 예고했다.

노조는 구청장들이 이미 합의한 바 있고, 전국 법원 민원실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6월부터 점심 시간 휴무제를 요구했다.

각 자치구는 무인민원발급기 확충, 일부 업무 제약 등 현실적으로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시행을 미뤘다.

이날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이 점심 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노조

“문제점·대안 판단, 적정 시기 검토...노조와 협의” 노조 “1500여명 권리 보장 시점 의문” 대응 예고

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민원 업무를 중단할 경우 예측되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판단해 시기 적절성을 검토해 예정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의 큰 흐름에 공감하며 그동안 노조와 시행 시기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현 상황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5월1일(부터)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

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관계자는 “구청장들이 제대로 논의할 자세가 되지 않았다. 구청 민원실·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1500여 명이 누려야 할 식사·휴식의 권리가 어느 시점에 보장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5개 구와 달리 광주시청은 점심 시간 민원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최윤희기자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친인척 채용의혹과 관련해 13일 광양시청 시장 집무실·도로과·총무과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 소속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투기 의혹’ 광양시장 집무실·관사 압수수색

소유 토지에 도로 내고 재개발 보상금 받아
정현복 시장·아내·아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남경찰이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 시장 관사와 광양시청 시장 집무실·도로과·총무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자신이 소유한 땅에 도로를 내고 재개발 토지 보상금을 미리 지급받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정 시

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정 시장의 아내·아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각종 관급공사 핵심 자료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휴대전화·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땅에 도로 신설 공사가 이뤄지면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의 땅 569㎡(172평) 중 108㎡(32평), 아들의 땅 423㎡(128평) 중 307㎡(93평)가 도로 개설 부지에 수용, 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광양시는 재산인 정 시장의 첫 임기

(2014~2018년) 중인 2016년 호북마을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소방도로 성격의 2차선 도로 신설)을 세웠다. 2019년 12월 인가,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정 시장은 또 자신의 성황·도이지구 땅(1704㎡, 350㎡)이 재개발 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 보상을 다른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미리 받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도 사고 있다.

정 시장의 아내가 2019년 8월 매실 농사를 짓겠다고 사들인 진월면 신구리 땅 주변에도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오동마을 주변에 위치한 문중묘를 위해 옥곡면 2차선 농어촌 도로확장 공사(삼존마을~오동마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광양·심종섭기자

제10회 보성세계차(茶)엑스포

2022 10th BOSEONG WORLD TEA EXPO

• 기간 2022. 4. 29. ~ 2022. 5. 5.

• 장소 보성군 일원

보성세계차(茶)엑스포가 2022년에는 제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됩니다.

보성군

한국차산업협회

주최·주관 보성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차문화축제